

성명서

-윤석열 후보는 정치보복 망언을 사죄하라-

우리는 과거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으로서 의정활동을 했던 민주당 소속 상임고문과 고문단입니다. 민주주의의 요체로서 국민의 축제가 돼야 할 대통령 선거가 한 후보자의 언동 때문에 나라 안팎에서 탄식과 함께 조롱거리로 전락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나라의 앞날과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정치 선배 세대의 성찰적 입장에서 진심으로 호소하고자 합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자신이 당선된다면 현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협박이며 정치보복 예고나 다름없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위험하고 또 위험한 일이 검찰총장 출신인 제1야당 후보가 노리는 검찰 공화국의 시대, 검찰 독재 정치의 현실화입니다. 촛불 정신으로 탄생한 현 정부에 대해 적폐수사 운운하며 정치보복의 마각을 드러낸 충격적 사고에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신성한 검찰권을 정치와 결부시키는 행태 자체가 적폐입니다. 한국정치의 역사에서 불쌍하고 억울한 죽음이 얼마나 많이 이어졌습니까. 이러한 검찰권력의 적폐를 해소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검찰총장은 본인을 위한 위선적 잣대를 들이대며 그 노력과 선의를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껏 뛰쳐나와 또다시 검찰공화국의 시대를 꿈꾸다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수많은 국민이 얼마나 고통스런 고난의 역정을 겪어야 했습니까. 과거 정치군인들의 독재정권 아래서 고생했던 국민에게 이제 정치검사들의 보복수사정권이 도래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하루빨리 떨쳐드려야 합니다. 벌써부터 검찰조직 내에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그 측근들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요직에 포진할 것이라는 소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후임 정권이 전임 대통령을 과잉수사하고 모멸함으로써 세계정치사에 유례없는 국가적 불행을 겪었던 국민에게 그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또다시 헤집고 있는 것입니다.

현 정부에 대해 허무맹랑한 적폐수사를 언급해 또다시 독재정권 시대의 악행을 떠올리게 한 윤석열 후보는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그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국민의힘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자당 대통령 후보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납득할 수 있는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민주당 상임고문과 고문단 일동은 윤석열 후보의 정치보복 망언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사죄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2월 11일

민주당 상임고문 및 고문단 일동